

與野 정국 주도권 어디로?...李,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국민의힘, 野 균열 때 ‘방탄’ 프레임
李 형량 관심... 재판 생중계 등 주장

민주당, 어떤 결과에도 李 중심 묻쳐
피선거권 제한되면 비명계 나설 듯
무죄 판결 땀 ‘尹 정치탄압 희생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일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뒤 회의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 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역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

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與 표결 불참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
與 “李 방탄용 특검 추진 지적 나와”
본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처리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진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

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

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理事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만,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추천’ 당론 결정

표결 절차 없이 의원 전체동의로 결정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

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